

보도시점 2023. 9. 5.(화) 석간 배포 2023. 9. 4.(월) 15:00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(‘23.9.5. ~ 9.15.)

◆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통한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「은행업감독규정」 등 개정 추진

2023.9.5.(화)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, 이를 위한 「은행업감독규정」·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및 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·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」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.

〈 참고 :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(Large Exposure) 한도규제 도입 배경 및 경과 〉

-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는 금융위기사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*를 보완하고자 ‘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’를 마련**, 회원국에 ’19.1월까지 시행 권고
 - * 익스포저가 집중된 거래상대방의 부도 발생시 은행에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
 - ** BCBS(2014), 「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」
- 이에, 우리나라는 ’19.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 중(’24.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)이며,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*
 - * 금융위·금감원(’20.4.16.),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
- 미국, 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(RCAP)*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
 - * BCBS가 바젤기준이 감독규정 등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도입되었는지 평가

금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는 ’14.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「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관리 기준」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

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 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*와 유사하나

* 은행법§35(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), 금융지주회사법§45(신용공여한도) 등

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*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**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저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,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.

* 의결권 50% 초과 보유,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

**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(단, 기본자본의 5% 초과 익스포저만 적용)

〈 참고 :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비교 〉

	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	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
규제근거	은행법 등	은행업감독규정 등(예정)
거래상대방	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	통제관계, 경제적 의존관계
규제대상	신용공여	신용공여 + 주식, 제3자 보증 등
한도	총자본의 25%*	기본자본의 25%**

* 총자본 : 기본자본 + 보완자본(후순위채 등)

** D-SIB에 대한 한도 : 기본자본의 20%

그간 감독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'19.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는 한편, 제도 도입시에도 은행권의 거액익스포저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*을 마련하였다.

* 예)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 등

아울러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,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,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등 개정안은 9.5.(화)부터 9.15.(금)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'24.1.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〉

- 예고기간 : 2023.9.5.(화) ~ 2023.9.15.(금), (10일)
-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[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]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
- 전자우편 : jmlee1012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948
- 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> 정책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[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]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
- 전자우편 : kwpark@fss.or.kr - 팩스 : 02-3145-8374
- 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> 업무자료 > 금융감독법규정보 > 세칙 제·개정 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민 (02-2100-2982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	책임자	팀 장	나혜영 (02-2100-2591)
		담당자	사무관	배인정 (02-2100-2592)
<공동>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충진 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욱 (02-3145-8380)